

“다수국민 탄압하는 반민주 독재법, 차별금지법 규탄한다”

다수국민 탄압하는 반민주 독재법인 차별금지법 발의정의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반동성이 가득치면 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다수의 시민단체가 지난 6월 29일(월)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다수국민 탄압하는 반민주 독재법 차별금지법 발의한정의당 규탄한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전체주의국가로 이행하려는 불길한 조짐이 도처에 포착되고 있다. 모든 언론방송이 정권에 대한 비판기사를 내보내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찬양 일색 기사로 도배되고 있다. 이러한 문비어찬가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보다도 교활한 모략이며, 역사적 퇴행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우리는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관례를 깨고 야당 뒤편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한 의회독재에 경악하며, 악법 제정도 서슴지 않는 폭거를 저지르지 못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을 입법 발의하겠다고 공표했는데, 이는 사전 각본에 의한 시나리오라고 의심할 수 없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모종의 밀약을 맺고 다수국민 탄압 독재법인 차별금지법의 총대를 맨 게 아닌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방송은 과거 독재정권을 비판했던 지렁스러운 유산을 핑계하고 오직 청와대지시를 받아쓰는 기사를 남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세균으로 운영되는 독립적 국가기관인 인권위는 자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커닝 한 신짜처럼 내팽개치고 있다. 오직 유엔의 앞잡

이가 되어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의 권고사항을 금과옥조로 여기며 매국노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반인권적 악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오는데, 이는 대국민사기며 역사의 퇴행일 뿐이다.

예 언론방송은 차별금지법의 무서운 독소 조항들을 외면하고 있는가. 도대체 언론방송의 사명과 공정성은 어디다 핑계치고 부역언론광송으로 전락했는지 통탄스러울 뿐이다. 명분은 그럴 듯하게 차별하지 말라는 차별금지법인데, 막상 무경을 열어보면 한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독재법인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방송은 오직 차별금지법을 미화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는 현재의 언론방송이 민노총에 장악된 탓이며, 동성애독재와 다문화독재를 획책하는 세력에 장악된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다. 여기에 자유대한민국 정체를 파괴하는데 앞장서온 정의당이 비법잡이 광대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의당이 다수국민을 탄압하려는 전체주의 독재법인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걸 목과할 수 없다. 우리는 다수국민의 목에 칼을 겨눈 야만적 폭거를 자행한 정의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정의당은 정의란 이름을 쓸 가치도 없는 불의이며,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반민주적 정당 집권당의 기생정당에 불과함을 만천하에 폭로한다! 정의당은 즉각 분 당고 폐업하라!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거는 간단하다. 특정한 소수엔 동성애자(LGBT)뿐만 아니라, 가짜난민, 외국인 불법체류자, 반사회적 이단종파,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공산주의자 및 주체사상(북사) 등등이다. 그들은 무조건 소수이기에 보호받고 특혜를 누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서유럽의 역사적 배경에서 태동한 소수집단우대정책인 아퍼머티브 액션

(affirmative action)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실정과 전혀 동떨어진 주장인데 문화사대주의자들이 맹목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실체가 진짜인권인지 가짜인권인지 분별하지도 못한 채 오직 인권이란 허상에 현혹돼 맹목적으로 불나방처럼 탐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상적 인권개념이 아니며, 인권을 발자한 사이비인권에 불과하다. 무조건 소수이기에 보호받고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건 민주사회원칙에 어긋나며, 전체주의적 공산주의의인 것이다. 어떻게 그 어떤 반대나 비판목소리도 혐오발언과 혐오선동으로 매도돼 처벌하고, 일방적으로 고소당하면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인가? 예 이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악법을 제정하려고 하며, 특성소수자의 기본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도록 만드려는가? 누가 이처럼 한심한 하점쓰레기 법을 고상한 인권보호법인 양 호도한다면 말인가?

우리는 대한민국 언론방송과 인권위, 인권운동가들이 같은 동포인 북한주민의 인권유린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그러면서도 인권타령을 하는데 신물이 난다. 예 북한 전역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동포들을 위해 그 어떤 노력도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가? 북한동포들에게 미안하지도 않고 죄책감이 들지도 않는가?

우리는 지난 22일 유엔 인권 이사회(UNHRC)가 “북한에서 오랜 기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합의 채택(헌센서스 방식)으로 통과시킨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는 2003년부터 17년 연속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현 체재인 정부나 정의당, 민주당은 묵묵부답이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언론방송도 사실관계 위주로만 잠깐 다룰 뿐, 심각한 논조

로 비판하는 보도는 실종된 상황이다.

미국 국무부 또한 지난 25일 발표한 ‘2020년 인권매체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18년 연속 최악의 인권매체 국가’로 지정했지만 현 정부나 민주당, 정의당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LGBT, 가짜난민, 불법체류의 외국인 등의 인권에 대해서만 유독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기증스런 일인가? 우리는 이러한 인권팔이들의 표리부동한 이중성에 대해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있을 것임을 엄중히 천명하는 바이다. 세계 최고 기독교박해국으로 악명 높은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에 대해 비판 한마디 못하는 자들이 소수자언론을 들먹이는 코미디를 언제까지 봐야 할지기가 막힐뿐이다.

소수자 인권을 주장하는 이들이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들먹이는 1960년도에 섰던 세계인권선언도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1970년대부터 등장한 젠더이론이 들어갈 수가 없다. 동성애자(LGBT)들로 대변되는 ‘성소수자’에 대한 언급은 전본과 1조로부터 30조 어느 곳에서도 찾아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제껏 세계시민과 우리 국민을 속이고 세계인권선언이 마치 동성애자(LGBT)의 독점물인 것처럼 강변해왔다.

세계인권선언 전문과 제2조에선 ‘남녀평등’을 말하고 있고, 제16조에선 남녀결혼과 가정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무시한 채 성소수자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건 반인권적 요구와 주장이며, 독재적이고 파쇼적 발상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3조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제8조의 ‘법 앞의 인간인정 권리’, 제17조의 ‘법 앞의 평등과 차별 없는 법의 동등한 보호 권리’, 제18조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선교·행사·예배·의식 통한 종교나

신념 표현 자유’, 제19조의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30조의 ‘다른 사람의 권리 짓밟는 어떠한 권리와 자유도 불허’라는 조항에 위배된다. 그런데도 오늘날 세계인권의 흐름은 이를 완전 무시하고 무조건 특정한 소수를 절대 보호하고 우대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으며, 문화사대주의자들이 이를 맹목 추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필연적으로 다수 역차별’을 불러오게 되며, 파시즘과 나치즘, 전체주의 같은 소수에 의한 다수제배를 불러오는 끔찍한 일기예에 결코 응답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껏 미국과 서유럽과 달리 동성애자(LGBT)들을 박해하거나 법적으로 처벌한 역사가 없다. 또한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인종차별은 역사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와 일부 정치인들, 지식인들이 고집스럽게 피해지논리를 가져와 다수를 역차별하려는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일관하고 있다. 역사적 배경이 전혀 다른데도 미국과 서유럽의 사례를 맹목 추종하는 문화사대주의는 하루 빨리 극복해야 할 전근대적 유산일뿐이다.

우리는 정치권과 인권위에서 언론방송을 앞세운 여론몰이를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을 발의하려는 시도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 인권위는 근거가 불확실한 여론조사결과를 편집해 찬성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기간술도 포기하기 바란다. 아울러 정의당은 인권위와 짜맞춘 듯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행동을 반성하고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그 길만이 정의당이 속죄하는 길이며, 목숨을 이기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언론방송은 과거 독재정권을 비판했던 지렁스러운 유산을 회복해 차별금지법의 문제제기에 대해 긍정하게 심층 보도하라!

하나, 정의당은 자유대한민국 국민을 역차

별하고 탄압하려는 차별금지법의 비법잡이 광대짓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의당은 동성애자(LGBT)들,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들의 비호자가 돼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지 말고, 일반 다수국민의 반대의 견 존중하라!

하나, 정의당은 다수국민의 목에 칼을 겨눈 반민주적 정당이며, 집권당과 인권위의 기생정당 노릇하다가 불의당으로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정의당은 즉각 사과하고 차별금지법 발의 중단하라!

하나, 정의당은 미국과 서유럽의 역사적 배경에서 태동한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 실정과 전혀 동떨어진 문화사대주의자들의 어리석은 주장임을 각성하고 차별금지법 발의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정의당에게 엄중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동성애자(LGBT)들,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들을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는 구대장사에서 즉각 돌이켜라!

2020년 6월 29일
반동성이 가득치면 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건강강화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국교회수호결사대,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일사각오목회자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 젊은가치시민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강하세연구소, 생명인권학부모연합, 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오직예수사랑교회, 울시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참인권청년시민연대,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바른교육민들7학부모연합, 밝은빛가톨릭연구소, 한포여성가족정책원, 체대대비교세우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창주미래연합, 다문화예비가족대응국민연대(607단체),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자국민우선순위에 앞서는 국민대통합행동, 다음세대부흥을위한청년선진연합 외 시민단체

6.25전쟁 이해

박성기 // 육군 대령 전역, 32년 군복무, 천안보석교회 섬김 / 아산진즉복음회는동본부(대표회장 진동용 목사) 조찬기도회 특강인도

6.25전쟁의 올바른 이해와 안보현실 심각성 ①

아! ~ 아! 잊으라 어찌 그날을 잊으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기습남침으로 같은 민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며 찢을 수 없는 상흔을 안겨준 625전쟁이 일어 난지 70주년 되는 해이다. 625전쟁은 김일성이 소련 스탈린의 승인과 사주를 받고 중국 공산당의 지원 하에 저지른 것으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정전협정이 되기 까지 11.29일간의 전쟁으로 우리 민족에게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625전쟁은 2차 대전 이후 국제연합이 결성된 후 최초로 치러진 국제전쟁이고 핵무기만 사용되지 않았을 뿐 짧은 기간에 수백만 희생자를 낳은 열전이었으며 또한 이 전쟁은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소련과 중국의 공산진영과 UN의 깃발 아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려는 자유민주진영과의 이념전쟁에서 승리한 전쟁이었다.

1. 전쟁의원인과 잊을 수 없는상흔

선전포고도 없이 같은 동족에게 시작된 이 전쟁으로 희생된 전사·부상자는 한국군이 588,741명, 유엔군은 1447,947명 있었다. 이중 미군 전사자는 36,940명이나 되었다. 이외 민간인의 희생은 사망 373,599명, 부상 229,625명, 납치·실종은 387,744명이었으며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을 낳았고 전 산업시설의 80% 파괴된 민족 역사상 가장 참혹한 비극으로 우리 민족에게 찢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전쟁이었다. 전쟁 중에 북한군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을 조명해보면서 공산주의자들의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실체와 전쟁의 속성을 이해함으로써 이 땅에 두 번 다시는 625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부산 남구 대연동에는 625전쟁 시 유엔의 부름에 참전하여 전사한 2300명의 각국의 유해를 안장한 유 UN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가 있다. 잘 조성된 공원 내에는 UN의 일원으로 형 대신 참전하여 싸우다 전사한 토트트 병사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토트트 수로”가 있다. 그곳에는 역대 대통령들이 방방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표석이 있었지만 진보리는 두 명의 대통령은 표석은 없었다. 아무런 연구도 없는 대한민국의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UN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뒤편 나이에 피워 보지

도 못하고 17세의 어린 나이에 전사한 토트트 병사의 송고한 희생 앞에 숙연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하게 했다. 우리는 어린 토트트 병사의 희생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고 그를 추개 한 자들에 대해 응서할 수는 있어도 잊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이유는 우리가 풍강의 기적을 이루고 경제 10위권에 들어 풍요와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이 자유가 그의 희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함이고 또 다른 이유는 전쟁 대비를 소홀히 했을 때 그 대가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가를 자각하고 두 번 다시는 625전쟁과 같은 비극을 맞지 않도록 교훈을 얻기 위함이다.

625전쟁은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의 전쟁”으로 기습 남침한 북한군은 38선을 통과한 후에 파죽지세로 진격하여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한 후에 서울시민들에 저지른 만행은

은 전쟁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평화적 통일이 오기 전까지는 전쟁의 위험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과 이념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분명히 자각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2. 안보위협과 비극의 원인과 교훈

영국의 역사학자 이버트 조셉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라 했고,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도 “역사는 我와 非我의 투쟁의 역사이고 과거를 통해 현재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라 했다. 즉, 인류의 역사는 항상 도전에 대응을 하면서 이어져 온 대립의 역사였다. 역사는 항상 반복됨으로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할 만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안보현실을 느끼게 하는 것 같다.

과거를 올바르게 기억하는 민족은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하지 않지만 아픈 역사를 잊은

과거를 올바르게 기억하는 민족은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하지 않지만 아픈 역사를

잊은 민족은 또다시 아픔을 겪게 된다는 교훈을 새겨야 할 것이다. 감상적 안보관에

잊어 6.25전쟁의 이름과 공산주의자들의 실체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안된다.

글로써 다 표현할 수 없다. 인민군들이 서울대 병원에 들어가 입원 중이던 국군 부상병을 약 1천 명을 총으로 집단 학살하였다. 총으로 쏘아바라 죽지 않고 숨이 붙어 있는 자는 총창으로 찢어 죽이고 그레도 죽지 않은 자는 트럭으로 깔아뭉개는 학살을 자행하였다. 증언에 의하면 인민군들을 안내하고 앞장섰던 자는 같이 어찌까지 치료했던 남포당에 포섭된 병원의 의사와 직원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전쟁 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전쟁의 역사에 있어 가장 참혹한 만행은 대부분이 이념전쟁과 종교전쟁에서 저질러졌다. 이념전쟁과 종교전쟁의 특성은 어느 한쪽이 완전히 소멸되거나 항복할 때 전쟁이 끝나는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625전쟁은 공산세력의 도전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이념전쟁으로서 어느 한쪽이 항복하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 전쟁이다. 따라서 한반도에는 끝나지 않

은 민족은 또다시 아픔을 겪게 된다는 교훈을 새겨야 할 것이다. 625전쟁은 정전된 상태로 70년이 되었지만 그대의 참혹한 전쟁의 상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념전쟁의 속성을 망각한 채 북한의 거짓 위장평화공세에 매몰되어 설마 전쟁이 일어났겠나! 전쟁이 일어나면 누군가는 지켜주겠나! 북한의 핵무기는 통일되면 우리 것이 아니겠나 하는 감상적 안보관에 젖어 625전쟁의 이름과 공산주의자들의 실체를 망각한 채 살고 있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이 땅에 두 번 다시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쟁의 원인과 교훈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제시하였다

첫째는, 전쟁의 원인은 국가 지도층과 사회 엘리트층이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낭만적

인 안보관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다. 우리 민족의 광복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조국통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8월 5-8일 사이에 남북 총선거를 지르자하고 50년 6월 10일에는 여류민 조진식 선생과 남한 항무소에 수감된 남포당 지도자인 김삼룡, 이주하를 교환하지는 평화 제의를 해움으로써 우리 군 수뇌부와 국민들은 남침에 대한 경계마음을 완전히 버린 상태에서 전쟁지도부는 수 없이 보고된 결정적인 남침 징후를 묵살하여 철저한 준비된 북의 기습남침에 거의 무방비상태로 당한 참사였다.

둘째는,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 엘리트 집단의 현실을 무시한 안보무능과 직업군인의 상무정신과 윤리의식 결여이다. 김일성이 6월에 남침의 최자기로 판단하고 6월 16일 스티코프를 통해 스탈린의 동의를 받아 남침 시기를 6.25일로 정하였다. 6월로 정한 이유는 더 이상 늦출시 남침의 도노출 우려와 7-8월의 정미피하기 위함이었다. 북은 남침 전에

10차례(24,00명) 걸친 유격대를 파견하여 남한에 폭동, 파업, 반란을 획책했고 인민군은 38선 인근으로 병력과 장비를 결집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인민군의 남침 움직임에 대해 417회 걸친 남침 징후를 체방덕 참모 총장에 보고되었지만 모두 묵살됨으로 그 어떤 대비도 강구하지 않아 비극은 시작되었다. 전쟁 전에 인민군이 대한 결정적 공격 징후를 보고 받고 취한 저해적 조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체방덕 참모총장은 전방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정보보고를 받고도 전쟁 15일 전인 50년 6월 10일에 사단장과 연대장 등 중요 지휘관(12명)에 대해 인사이동을 단행하는 조우의 조치를 하였다. 또한 전방의 제6, 제7, 제8사단을 이동시켰고 갑작스런 조치로 신임 사단장이 임명된 날짜보다 늦게 도착하는가 하면 교대 부대가 이동 명령을 받았지만 전쟁 전에 미처 도착 못한 부대도 있었다. 이 조치는 개전 초기에 패퇴를 거듭하게 되는 큰 요인이 되었다.

② 또한 6월 24일 장도영 정보국장은 용진, 동두천, 춘천, 포천, 강릉지역 전방 정보를 분석 결과 인민군의 전면 남침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여 24일 오후 2시에 오늘 저녁이 위험하니 오늘 밤만이라도 비상경계령을 부활시켜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체방덕 참모총장은 “바닥 화를 내며 오전에 해제를 했는데 어떻게 오후에 다시 부활시키느냐”며 단호하게 거절하였고 다른 국장들도 “유언비어를 퍼뜨려 사회를 혼란시킬 작정이오! 당신 빨갱이 아니요! 하며 정보국장을 나무라는 그날 모습은 적에 대한 현실감각이 얼마나 없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24일 당일 그간 지속되어 오던 비상경계체제를 해제하고 장병들은 휴가, 외출 외박을 보냈고 대부분 영내에는 1/3 수준의 병력만 남겨져있었으며 이러한 조치는 개전 초기에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원인이 되었다.

③ 이 외에 6월 20일 임영신 상공부 장관은 인민군이 곧 남침한다는 소문이 무성하여 9월경 북한 사정을 잘 아는 김기희라는 사람에게서 비로 60원을 주고 북한에 보내어 정탐시킨 결과 남침 징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가서 전쟁을 대비할 것 같은 건 의하였으나 옆에 있던 신성모 국방장관은 대통령에게 남침정보를 믿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6월 25일 새벽에 인민군이 38선을 돌파기 습남침을 하였다라는 보고를 받고 그는 6시 10분이 경과된 25일 10시에 장영중 비행장에서 낚시 중인 이승만 대통령(75세)에게 보고를 하였다.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심한 질책을 하자 그는 이때 그는 “북한군이 대거 남침하였습니까. 수일 내 평양으로 향한 각하의 명령을 받으려고 합니다”라며 답하였고 6월 28일에는 중앙방송에 나가 침입한 적은 후퇴하고 있다. 민족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완수하고 말 것이다. 라며 거짓 방송으로 국민을 속였다. 그리고 체방덕 참모총장은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적의 남침이 아니라 불참한 공비 두목 이주하와 김삼룡을 살려내기 위한 책략 같으며 남쪽에 있는 부대를 즉시 반격하여 격파하겠다고. 하며 절제명령의 위기 상황에서 사실을 예과하여 애매모호하게 보고 하였다. 이후 25일 용진 반도에 위치한 17연대가 고립되어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 육본 보도과장인 김현수 대령은 17연대는 해주고 38선 이북으로 20km 북진을 해주고 있다고 거짓 방송을 하여 서울 시민은 우리 국군이 밀고 올라가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로 인해 기습남침 후 3일 만에 서울에 북한군 진격하였을 때군의 방송을 믿고 있다 미처 피난준비도 못하고 당한 서울시민들의 공포감과 정부에 대한 반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으며 서울은 패니 상태에 빠져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국군의 명운이 달린 중추대한 상황에서 사실을 외면한 거짓방송은 엄청난 희생을 입게 한 원인이 되었다.

셋째는, 당시 국군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재와 전쟁지도 능력의 결여가 전쟁의 피해를 키웠다. 625 전쟁 발발 전 북한군이 철저한 전쟁 준비를 한 것보다 더 크게 우리군은 국가차원의 전쟁 대비 계획이 없었으며 전쟁연습을 한 적도 없었다. 또한 전쟁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 등 모든 것이 열세였고 병사들의 교육훈련도 소홀히 하여 전투수행능력이 형편없는 상태였다. 또한 전쟁을 지휘하는 지도부의 전쟁지도능력의 무능과 군내부에 침투한 불온 세력에 의해서 인민군이 더 큰 분쇄였다. 몇 가지 사례는 ① 628일 새벽 1시 45분 미아리 방어선이 무너지고 적 전차가 돈암동에 진입하였다는 상황을 강릉분대 대령으로부터 보고받은 체방덕 참모총장은 공방길(강정식 대령)에게 한강교 폭파 지시를 한 후에 그는 육본을 떠났다. 아직도 한국군 제1, 제5, 제7, 수도 제2, 제3사단이 아직 강변에 있어 고립될 상황이었었고 미군 물자 또한 대부분 서울에 있어 만약 한강을 조기에 폭파된다면 국군 6개 사단이 고립되고 미군과 국군의 물자와 장비가 대부분의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라 한강 폭파를 지연시켜 줄 것을 애고 문단 그린우선대령과 미아리 전투사령관 이윤중 소장이 간곡히 간청 하였음에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한강을 인민군과 철교 폭파는 단행되었다.